

사회투자재단 서민경제시리즈 2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

금융생활법률 가이드



사회투자지원재단
Korea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

하늘이 무너져도

 **찾아낼 구명!**

금융생활법률 가이드



사회투자지원재단
Korea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

하늘이 무너져도

웃아날 구멍!

금융생활법률 가이드

I. 연리 수백% 사채 빚, 어떡하나? 7

1. 고리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법 대부업, 꼭 따져야 할 6가지 핵심원리
3. 불법 일수꾼들에겐 이자제한법으로 맞서라

II. 불법사채, 실상은 이렇습니다 14

1. 관할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처벌대상입니다
2. 연 49% 이자율이 넘으면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지나치게 잦은 전화도 불법 빚 독촉입니다
4. 불법중개 및 불법 중개수수료도 안 됩니다
5. 불법 고리대의 온상지 인터넷 대출광고, 속지 마세요!

III. 모든 빚 독촉 절차는 금융기관 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21

1.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하지 않는다
2. 가재도구 압류한다며 깡패가 들어와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3.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가 금지된다
4. 부인이라도 남편 빚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책임질 의무가 없다
5. 부인 빚 때문에 남편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예외다
6.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으로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다
7. 채무자의 혼동을 악용하는 대표적 협박 추심사례

IV. 간단한 법률용어는 알아두면 편하다! 30

1. 지급명령이란?
2. 이행권고 결정
3. 공정증서(공증)이란 무엇인가?

V. 불법추심, 이렇게 대처하자! 33

1. 대처준비
2. 민원 제기 또는 신고
3. 사례 소개 : 만삭 임신부, 사채업자와 싸워 이기다
4. 불법 대부업 신고로 포상금 타고, 많이 낸 이자도 돌려받자!

VI. 고리대 돌려막기는 그만!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찾기 39

1. 빚 독촉이 옵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2.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제
3. 법원의 개인회생제, 일정 소득 이상의
 봉급생활자 · 자영업자에 적합
4.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VII. 아이가 아픈데, 친지도 친구도 미안하다고 한다면? 51

1. 저소득 · 저신용층 생계비 저리 대출
2.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사업(희망키움뱅크사업)
3. 대출도 안 되고 당장이 급할 때 긴급지원제 이용
4. 돈 없고 빚 많으면 이용해 보세요!

VIII.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56

1. 금융관련 연락처
2. 개인파산 · 개인회생 및 부당이자 반환 청구 상담 및 지원

책을 발간하며

사채로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탤런트, 빚 독촉으로 성매매에 내몰린 대학생 딸을 죽이고 자살한 아버지…。 고리대 앞에서는 유명인도 보통사람도 모두 먹잇감일 뿐입니다. ‘마우스로 하는 간편한 대출!’, ‘불법 빚 독촉이 없는 대출!’ 등 연예인을 앞세운 TV 고리대 광고는 넘쳐나고 있지만, 고리대 이용자는 안심하고 돈을 빌리려다가 사실상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돈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이고, 간신히 돈을 빌려도 하늘의 별만큼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더미에 내몰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재산이나 안정된 소득이 없으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저소득층을 유혹하는 고금리 상품은 범람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병원비로, 대학등록금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고금리 유혹에 빠지고, 마침내 스스로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무서움을 제대로 모른 채 돈을 빌리

기도 하고, 한 번 고리대에 빠진 뒤에도 가혹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영원히 벗어날 길을 못 찾고 맙니다.

하지만 고리대와 불법 빚 독촉의 유형을 정확히 알고 차분히 대응하면 한없이 무겁던 채무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재테크, 세테크란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부자일수록 돈을 불리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잘 알고, 없는 사람일수록 꼭 필요한 생활정보로부터 소외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이 책은 불법 고리대와 가혹한 빚 독촉에서 채무자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빚에 시달려 밤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평온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싶은 모든 서민들의 소망이 빚 독촉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작은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

금융생활법률 Ⅰ

연리 수백% 사채 빚, 어떡하나?

대출 최고금리는 대부업체 연 49%,
무등록 사채업자 연 30%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채 못 갚아 딸 살해 후 자살한 아버지

아버지가 사채를 못 갚아 유혈업소로 끌려간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을 부른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9년 4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백모(3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부업체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여대생 등을 상대로 연 이자율 68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강제로 유혈업소에 취업시켜 수 천만원을 뜯어왔던 것으로 밝혀져 큰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연 120~68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212명에게 33억여원의 이자를 챙기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대부업법의 법정이자율은 연 49%

- 현행 대부업법 제 5조는 법정이자율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음.
- 대부업법의 법정 이자율 연 49% 규제는 대부업체를 포함해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에 대출을 받은 경우 적용함.

■ 이자제한법 법정이자율은 연 30%

-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과 무등록 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자이지만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에게 적용되고 1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릴 때 적용됨.
-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흔히 「대부업법」이라 부르고, 「대부업자」는 급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이지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49%입니다.



고리대,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었던 고 안재환 씨도 빚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린 여대생은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원금의 3배에 달하는 빚을 진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여대생의 아버지는 급기야 자신의 손으로 딸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빚의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재산도 소득도 많지 않은 서민들이 빚에서 탈출하기란 몇 배나 어렵습니다.

빚의 수렁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은행을 제외한 금융권의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유명업체라고 낮은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캐쉬, ○○○론 등과 같은 대부업체,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업체가 최고 연 49%까지 대출 이자를 받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의 경우 법을 어기며 연 수백%까지 이자를 받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여전히 연 72%에 달합니다(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연 197%).

법대로 하더라도 10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490만원을 이자로 내기 때문에 결국 149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제때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업체들은 소위 ‘돌려 막기’ 즉 재대출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어 원금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원리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한 번 고금리 대출에 손 댄 사람은 평생 채무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리대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보험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의 경우도 이자율에 있어서는 대부업체와 사실상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 대부업, 꼭 따져야 할 6가지 핵심원리

등록대부업체 여부, 이자율 위반 여부, 이자율·업체명 등
게재 여부, 수수료 수취 여부, 계약시 자필 작성 여부,
과잉 대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1) 등록 대부업체 아니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고리대는 이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일단 이용
한 경우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관
할 시·도에 전화 등으로 문의해 해당 대
부업체가 등록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등
록 대상은 대부업체뿐 아니라, 사채업
자나 일수업자까지 포함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나 일수업자가 대
부업에 종사하거나 대부광고를 할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이자율 위반 여부 따지기

연 49%를 초과하는 대부금리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다 지급한 부분은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합니
다. 또 연 49%는 연체 이자율을 포함하며,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일수업자의 경우는 매일 매주 매월 등 매 상환시기마다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다음 장의 사례에서 나오겠지만, 일수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교묘히 불법 고리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일수이자계산기를 활용하면 유리합니다(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로 들어간 뒤 ‘통합검색’ 창에 ‘일수이자율 계산기’로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채 전단지, 업체명과 이자율 등이 제대로 나와 있나요?

한때 길거리에 넘쳐났던 대부 광고 전단지도 규제 대상입니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4)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안 돼!

대부업체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먼저 떼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되거나, 원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또 대부중개업체가 돈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수수료, 보관료 등은 일체 이자로 간주하며, 예외적으로 담보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대출관련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5) 중요한 사항은 자필로 적도록 규정합니다

채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경우 거래상대방은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대부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성녹음 등이 이뤄졌을 경우는 예외).

6) 과잉대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계약이라도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일수꾼들에겐 이자제한법으로 맞서라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나 일수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합니다만, 이런 규정을 어기고 영업하는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흔히 동네나 직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대출해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 B(39·여·행정 7급)씨에게 4일 동안 7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0만원을 떼는 수법으로 연 760% 이상의 고리를 채기는 등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동료 공무원 9명과 일반인 37명 등 46명에게 996차례에 걸쳐 17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업법상의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자제한법을 활용하면 과도한 이자 청구를 막고 추가 지급한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핵심정리

- 이자제한법은 불법 사채업자나 개인으로부터 10만원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은 연 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최고 이자율은 연 30%입니다.
-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 3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이를 초과해 갚았을 경우 과다 지급한 부분은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그래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부분은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할인금, 공제금, 체당금, 예금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와 함께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도 최고 이자율인 연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가 광고를 내고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대출을 한 경우, 현행 대부업법 제19조 1항을 위반했으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금융생활법률 Ⅱ

불법사채, 실상은 이렇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관할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는 처벌대상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R(여)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서울 소재 S사로 부터 2008년 1월 180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후 100만원을 실수령하였으며, 매 10일마다 72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음. (연이자율 2628%). R은 72만원씩 5회에 걸쳐 총 360만원의 이자 및 170만원의 원금 등 총 530만원을 S사에 상환하였으나, S사는 50만원을 추가지급할 것을 요구함. 해당 시·도에 문의한 결과 S사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 양 허위로 영업지역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영업한 것으로 확인됨.

- ▶ 대부업법 제3조(등록)의 규정에 위반한 무등록 대부업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부업법 제9조의2(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부업법 제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에 의한 이자율 제한(연 49%)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과분 무효 및 원금 반환청구 가능

Yes○○이라는 무등록 대부업자는 다른 대부업자의 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연체대납, 신불자 가능 등의 내용으로 대출 전단지를 뿌림.

〈예시〉

※ 돈에 대한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

일수
·
달돈
·
연체대납

원금	이자	기간
100	2만	12
200	4만	12

■사업자대부업자

■주부우대

■설계사 ■직장인

■신불자가능

■사금융과다대출자

원금	원금+이자	일
100	10,500	100
200	21,000	100

아는일

👉 달돈대출

👉 연체, 곁제, 대납 2%

👉 일상환대출

👉 타업체 안되는 대출 100% 해결

Yes

무료
전화

15

-

478

대부업등록 대구 제: 18호 연이율 48% 미만 연체이자, 추가비용 없음 대구 밀서구 2동 77번지

- ▶ 대부업법 제3조(등록)의 규정에 위반한 무등록 대부업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부업법 제9조의2(대부업에 관한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대부업 광고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조사하여 실제 대출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부업 등록번호 허위 기재 부분은 대부업법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제2항 위반 :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 49% 이자율이 넘으면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등록대부업체인 ○○머니는 2004년 1월초 충남 부여 출신인 황모씨에게 대출원금 1000만원에 연이율 66%(월 5.5%, 당시는 합법이었으나 현재는 연 49%까지만 합법)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55만원을 선이자로 수취하고, 매월초 55만원을 이자로 받은 후 2004년 12월말 대출원금 1000만원을 황모씨로부터 받음.

▶ **대부업법 제11조(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에 의한 이자율 제한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과분 무효 및 반환청구 가능

* 언뜻 보면 1000만원에 대해 이자로 55만원(월 5.5%, 연66%)을 받고 있으므로 당시로서는 합법적인 고리대부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선이자 55만원을 수취했으므로 대출원금은 945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년 총이자(이자)는 대출원금 945만원에 대한 연 66%인 623만 7천원(월 51만 9750원) ; 총원리금 상환액 1568만 7천원을 넘지 않아야 함. 그럼에도 황모씨는 이자로 660만원(11개월×55만원)과 대출원금으로 1000만원을 갚았으며 총원리금 상환액은 1660만원임. 따라서 지금의 사례는 이자율 제한 위반이며, 황모씨는 초과분 91만 3천원에 대해 등록대부업체인 ○○머니를 상대로 반환청구 가능함.

※ 현재의 대부금리 상한은 연 66%가 아니라 연 49%임.



지나치게 잦은 전화도 불법 빗 독촉입니다

등록대부업체인 ○○○캐쉬의 직원인 김씨는 채무자 권모씨가 대출받은 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권모씨의 집과 핸드폰 및 사무실로 한달에만 300여통의 전화를 걸어 이자를 갚을 것을 독촉하였음. 또 빗 독촉 과정에서 권모씨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채무사실을 알게 하였으며, 권모씨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됨.

- ▶ 300여통의 채권추심 독촉전화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침 ; 따라서 대부업법 제1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4호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전화로 채무자 권모씨 이외의 자인 그 가족과 직장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림 ; 따라서 대부업법 제10조(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중개 및 불법 중개수수료도 안 됩니다

대부중개를 하는 대부업자 박모씨는 2005년 9월 중순 대출을 받으러 찾아온 김모씨에게 다른 무등록 대부업자를 연결해주고 김모씨로부터 대출금액의 1.5%인 1만5천원을 중개수수료로 받음

- ▶ 대부업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1항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대부업법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제2항 대부받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규정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채이용자가 꼭 작성해야 할 자기채무상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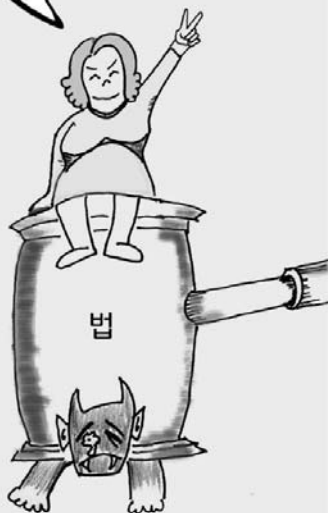
대출 일	채권 자	대부업 등록 여부	연 락 처	주 소	차 용 액	실제 차용액	잔존 채무	상환 방법	1회 변제금	갚은 횟수	이 자 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채무발생일 ② 대부업체명 ③ 대부업 등록 여부(관할시도홈페이지 또는 대부업담당부서 확인) ④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⑤ 대부업자의 주소 ⑥ 계약서상의 금액 ⑦ 선이자, 수수료 등 기타 제외하고 실제 수령금액 ⑧ 현재 남아있는 채무금액 ⑨ 원리금상환, 이자상환(일수, 월변) 한번 변제할 때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상환횟수 ⑩ 1회 변제금 ⑪ 갚은 횟수 ⑫ 이자율

금융생활법률 尤 Ⅲ

모든 빚
독촉 절차는
금융기관 맘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채무자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하지 않는다

가압류 예정통보서 등은 가짜인 경우가 많다

채무자는 “가재도구(유체동산)를 (가)압류하겠다”는 추심원의 위협이나 ‘유체동산 가압류 예정 통보서’ 같은 우편물을 받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압류 통보는 문자 그대로 통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빼돌릴 경우에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가압류입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가압류는 긴급하게, 채무자가 모르게 해야 합니다. 사전에 채권자가 “당신 재산을 가압류하겠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가압류당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동산(가재도구 포함), 채권(월급, 전·월세 보증금 등),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등),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압류를 해봤자 소용이 없고 법원 비용만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집행 절차가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채권자는 재산을 차압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자신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는 가압류할 의사조차 갖지 않았더라도 말이지요.



1) 가압류는 법원 집행관만이 합니다

가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가재도구 압류를 한다며 강패처럼 생긴 사람들이 함부로 채무자 집안에 들어와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딱지를 붙이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집행관만이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고 해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한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본집행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①본집행 신청서 ②집행문을 부여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집행관이 본집행 신청서를 받으면, 법원집행관은 물건의 보관장소(대개 채무자의 집)에 가서 목적물을 점검한 후 채무자에게 본압류를 집행한다는 것을 고지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2) 압류물의 매각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는 법원 집행관에게 매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매각기일은 압류 기일로부터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지정되며, 집행관은 매각을 실시하기 3일 전에 매각일시, 장소 및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압류물에 대한 매각절차는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집행관이 매각조건

을 정해 고지한 뒤 압류물에 대해 최고가를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선정합니다. 매수인(경매인)이 대금을 지불하고 매각물을 인도하면 절차는 종결됩니다. 집행비용도 낙찰 대금에서 배분합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채무자의 배우자는 경매가액의 50%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경매물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 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 신청 → 법원의 가압류 결정 → 채권자의 본안 소송제기 → 승소판결 → 강제집행 등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가압류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절차에는 많은 시일과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120만원 이하의 월급은 압류가 금지된다

월 급여 120만원 이하를 받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월 113만6000원)에 준하는 월 12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없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 2005년 7월 28일 시행했습니다.

급여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서를 발부받아 채무자의 회사에 보내면 회사가 법원이 결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 월 120만~240만원까지는 1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월 240만~600만원을 받는 경우는 급여의 절반까지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급여에서 얼마나 압류가 가능한지는 다음의 표와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압류가능 금액 비교표

단위 : 만원

월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 가능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 몫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 급여 압류가능 금액 계산식

급여액	120만원 이하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액	0원	급여-120만원	급여×1/2	급여-[300만원+ {(급여/2)-300만원}/2]



**부인이라도 남편 빚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신 책임질 의무가 없다**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 별산제’란, 부인 또는 남편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한 뒤에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배우자와 무관한 자신의 재산이며, 따라서 부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증 관계가 없다면 배우자의 채무를 상대 배우자가 대신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모 형제가 갚아 줄 의무는 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부인 빚 때문에 남편 재산이 압류되는 일은 없지만 가재도구 등은 예외다

이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매각대금의 50%를 요구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소득, 부동산 등만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동산(TV, 가구 등 가재도구)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할 경우 배우자는 경매액의 50%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매수하겠다는 가격이 다른 입찰자와 같을 경우 남보다 우선해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매 브로커가 많아 매수신청 가액이 지나치게 올라갈 때는 우선매수를 포기하고 50% 배당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혹 추심원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며 채권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 딱지는 법원명령서를 들고 온 집행관만 붙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과 특별법으로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이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해당 법 제195조)

- 채무자와 동거 친족(사실상 배우자의 동거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 침구 · 가구 ·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 연료 및 조명재료
-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등
- 채무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의 가압류/압류가 금지되는 물건(해당 법 제35조)

-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등(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등)



채무자의 혼동을 악용하는 대표적 험박 추심사례

1) 추심원이 유체동산(가재도구)을 압류한다고 조사 방문을 나온다고 합니다

‘추심’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행위를 말하며, ‘추심원’이란 채권기관으로부터 빚을 독촉하는 권한을 양도받은 사람입니다. 추심원은 합법적인 선에서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밖에 없으며, 가재도구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할 권한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권한은 법원 명령서를 들고 온 집행관에게 있습니다. 추심원은 법원 판결문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채무자를 방문하여 채무 변제를 상의할 수만 있습니다.

압수수색, 강제수색, 영장집행과 같은 단어로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불법추심 행위입니다.

2) 신용카드, 대출 빚을 연체했다고 사기죄로 형사고소, 지명수배를 내린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로 인해 형사 처분이나 지명수배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빚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한때 400만 명에 달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경제활동인구 열 명당 한 명은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옥을 몇 만 개나 더 지어야 할지 모르는 숫자죠.

형사 처분을 가하기 위해 채권자(금융기관)는 연체자가 ①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로 연체한 경우 ②신용카드 발급·대출 후 한 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③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등에 해당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형사 처분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등에 그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채나 카드빚이 있는 상태에서 추심원이 사기죄를 거론하며 고발 운운하더라도, 채무자는 겁부터 내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사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까지 모두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당할 수 있고, 월급 생활자의 경우 봉급의 일정액을 가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120만원 이하의 급료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빚을 지고 사망할 경우,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식이 사망자의 채무를 승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 등이 상속법에 의해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 및 자녀, 부모형제, 채무자의 친가 및 외가의 4촌 등까지 해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생활법률 允 IV

간단한 법률용어는 알아두면 편하다!

카드사, 은행 등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대표적인 소송을 소개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편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아무 사건이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즉 액수에 상관없이 금전의 지급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상의 재판절차일 경우 채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공시송달이 없음).

이행권고 결정

2,000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의 경우 원고(채권자)·피고(채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소장 부분(복사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보내고 피고가 그 등본을 받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지급명령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공정증서(공증)이란 무엇인가?

공정증서는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한 뒤, 약정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때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일반적으로 법인체)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체결합니다.

카드사 등에서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돌리는 대환대출 계약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공증은 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불법사채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라!



금융생활법률 兪 V

불법추심, 이렇게 대처하자!

겁먹지 말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세요.



불법 채권추심, 모르면 당하고 본인의 채무도 증대될 뿐입니다. 일단 불법 채권추심 관련 법률 조항(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의2)을 숙지합니다. 이 조항에 나온 불법 채권추심은 형사 처분 대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채무자(보증인 포함)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업무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 ④ 다음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면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를 남기고, 추심원이 무단 침입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 또는 신고

불법 대부업은 신고포상금도 줘요!

채무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비록 빚을 졌지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부당한 고리대와 추심으로부터 인권이 유린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불법추심이나 고리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채무자는 다음 기관에 문서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에 대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사채 피해가 극에 달했다는 방증이지요.

신고 또는
민원제기
가능한 곳

-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
국번없이 **110** 번 (정부 민원 콜센터 전화로 통합)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 청와대 신문고 <http://www.president.go.kr>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해당 금융사



연 수백%의 고리대에 신음하던 여성, 사채업자에게 1500만원 돌려받게 된 사연

서울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모씨는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에 필요해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2005년 10월부터 박씨는 한 대부업체와 총 8번 거래했으며 평균 대출금리는 연 250.4%에 달했습니다.

박씨는 대부업체를 사용한 지 꼭 1년만에 갚은 돈이 1억원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채무독촉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씨가 사용했던 대부업체는 박씨가 돈을 빌릴 무렵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자율은 연평균 250%의 고금리였습니다.

박씨는 이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자율 계산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박씨가 직접 했습니다. 이자 등의 지급내역과 계좌이체 자료를 박씨는 일일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박씨는 2007년 10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지급명령(절차가 간편한 간이재판의 일종)을 신청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소송인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자체 조정으로 대부업자에게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씨는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대부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 피해자가 고리대업자를 ‘채권추심’(빚 독촉)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박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가혹한 빚 독촉 때문에 유산이 우려됐던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왼쪽의 글은 국내 최초로 대부업체 이용자가 지나치게 많이 갚은 고리대 이자를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사례입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던 박소진(가명) 씨가 주인공입니다. 박씨 부부는 대부업체의 불법 고리대를 고소해 형사 제재했고, 지나치게 많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원 조정을 받아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박씨의 경우 계좌이체 자료 등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기에 법적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고리대 이용자나 불법추심 피해자는 녹음이나 문서 등의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모아야 합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로 포상금 타고, 많이 낸 이자도 돌려받자!

지난 4월말부터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세청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만들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은 5월부터 불법 대부업이나 무등록 대부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많이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이자의 변제를 강요받는 피해자가 채무 부존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연락처 : 국번없이 **132** 번, <http://www.klac.or.kr/>
-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 국번없이 **110** 번
(정부 민원 콜센터 전화로 통합)

금융생활법률 尤 VI

고리대 돌려막기는 그만!
내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찾기

개인파산 · 회생제 등은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내게 맞는
채무조정법 찾기!





빚 독촉이 옵니다!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1) 연체가 시작되면, 급전을 찾지 말고 채무조정제도를 찾아라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찾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급전대출은 빚을 몇 배로 늘릴 뿐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 재산상태, 부채규모, 실질적 변제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자감면, 원금의 일부 감면이나 상환의무 완전 면제 등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2) 자기 상태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라



채무조정은 크게 공적절차와 사적절차가 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절차는 법원이 주체로 진행하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제는 민간 채권기

관들이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사적 조정법입니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중심의 개인파산제

1) 개인파산제, 저소득층에게 가장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법입니다

최근 과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확 늘었습니다. 이중 ‘파산’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경제적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는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 새 출발(fresh start)의 탈출구이며, 미국에서는 이를 반영해 ‘파산보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파산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자의 빚 갚을 책임과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면책 불허가 사유도 있다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면책률은 9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개인파산자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은 빚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기성이 강한 파산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거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소극적인 불고지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소위 '카드깡' 이 문제될 수 있으나, '카드돌려막기'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하여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긴급적 문제 삼지 않는 편임.
-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 개인파산 후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 (개인회생은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과다한 낭비'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를 아주 좁게 해석하여 '과다한 낭비'로 인해 면책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음. 즉, 법원실무상 '신용카드 20개를 활용하여 고급 호텔에 빈번히 출입하거나 소위 명품 브랜드의 구입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만 과다한 낭비로 보아 면책을 불허가 함.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의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최근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
-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 대물변제하거나 담보제공한 경우

이상의 면책불허가 사유 중 법원이 주로 심리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린 행위, 도박 등 사행행위 해당 여부 등입니다. 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며(이른바, '재량면책'), 실제로 법원 실무는 재량면책을 폭 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이를 숨기기보다는 본인의 사정을 솔직하게 기재하여 법원의 재량면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면책제도 핵심

개요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이란 비영업자인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총당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이자도 갚기 힘든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정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임. 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자의 신청 등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절차를 말함.
신청대상	지급 불능 상태에 있는 자
대상채무	<p>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대상이 됨. 면책은 채무자의 빚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빚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음.</p> <p>다만 아래의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로 변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여,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채무조정수준	전부면책결정의 경우 모든 채무의 상환의무가 없어짐.
보증인에 대한 효력	보증인에게서는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없음.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를 갚든지, 능력이 없을 경우 개인파산제 등 채무조정제를 이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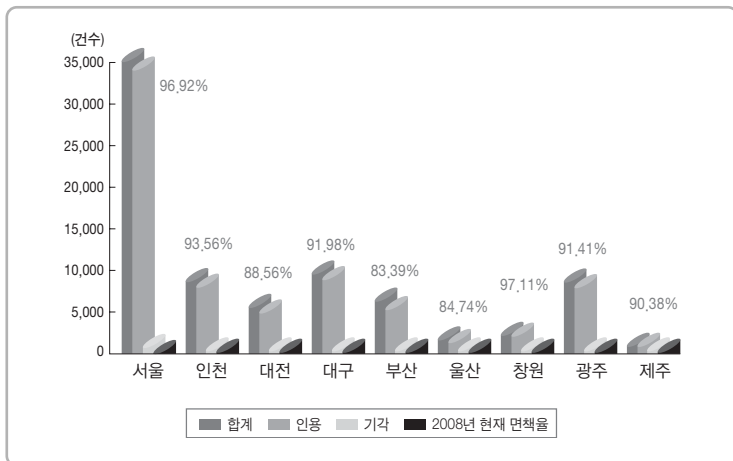
3)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여러 불이익이 없어진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자식에게 해가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

개인파산은 크게 파산선고→면책결정·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면책 확정(보통 면책결정 후 2주 뒤)을 받으면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최악의 경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한정될 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법원은 엄청난 사치나 낭비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경우,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에만 면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면책이 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불이익이 무서워 파산신청을 주저하고 채무 상환도 못 한다면 평생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2008년 전국 면책율



4) 개인파산면책을 둘러싼 5대 거짓과 진실

거짓말 유형	진 실
보증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채무자의 연체 당시부터 보증인의 책임은 이미 발생한 것임. 채무자가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한다고 보증인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보증인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함.
직장을 다닐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변호사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이러한 제한은 없음. • 현실적으로는 채무자들이 연체상태에 빠지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아 파산신청 시 크게 고려할 부분은 아님. 또한, 법원이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직장에서 채무자의 파산 사실을 알기 어려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하여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 퇴직 사유로 나와 있어도 사용자는 개인파산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통장 압류 등의 불안감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정기예금(적금) 등으로 재산형성이 가능함.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의 경우 파산선고로 인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자식에게 지장이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 없음. 부모님이 평생 갚지 못할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 자녀에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음.

■ 면책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

- ①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②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③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주식회사의 이사직과 유사)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법원의 개인회생제, 일정 소득 이상의 봉급생활자·자영업자에 적합

개요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임.
- 장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5년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의 1.5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으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신청대상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임.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음.

대상채무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로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대상임.

채무조정 수준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여야 함.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 중 자신과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함.
 - ※ 가용소득 = 소득 - 각종 세금* - 법원 인정 생계비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 등)
 - ※ 2009년 법원이 인정한 월 생계비(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함)

구분 (본인 포함)	최저생계비	법원 인정 생계비 (최저생계비×1.5)
1인 가족	490,845원	736,267원
2인 가족	835,763원	1,253,644원
3인 가족	1,081,186원	1,621,779원
4인 가족	1,326,609원	1,989,913원
5인 가족	1,572,031원	2,358,046원
6인 가족	1,817,454원	2,726,181원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보증인 효력이 없음.
-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일정 이상 상환하거나 채무조정제 활용 필요

개인파산제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과도한 사치나 낭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채무자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충실히 갚으면, 원금이 남더라도 면책이 가능하죠.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제도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거나, 자신의 장래 수입으로 일부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일정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상실(면책 이후에는 자격취득 가능)이 되는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도 이용하기 적합합니다.



채권기관 중심의 채무조정제도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제도

자산관리공사가 본인의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만 채무조정대상이 됩니다.

구분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전환대출)
개요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고금리의 채무를 저금리의 채무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
신청 대상	신용회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을 대상 〈매입채권기준〉 ①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3천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의 연체채권	①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정상적으로 상환중인 채무로써 금리가 30% 이상·3천만원 이하이며, ② CB사의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는 채무자 ③ 2009년부터 3천만원 이하의 채무대상 ※고금리 원금 채무를 대상으로, 보증채무 제외

구분	신용회복기금(채무조정)	신용회복기금(전환대출)
	<p>② 2008년에는 1천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하고, 2009년부터 3천만원 이하 채권을 매입할 예정</p> <p>※기초생활수급자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채권금액에 제한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함</p>	<p>〈신청(지원) 제외자〉</p> <p>①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청일 현재 고금리 채무를 연체중인 자 - 최근 6개월간 25일 이상 연체자 포함</p> <p>② 보증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자와 만 70세 초과된 자</p> <p>③ 전환대출 대상채무액이 50만원 미만인 자</p> <p>④ 공사의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신용평가결과 B등급인 자</p> <p>⑤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자</p> <p>⑥ 2008년 9월 2일 이후 발생 채무</p> <p>※ 단, 그 이전에 체결한 고금리채무가 한 건이라도 있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고금리 채무를 합하여 총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p>
채무조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관계자(주채무자, 보증인 등)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감면은 없고,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 시 현가할인율에 의해 일부 감면 • 특수채무관계자(보증인 등)는 원금의 20~30%를 감면 • 이미 발생한 이자 및 경과이자 는 모두 면제 됨. •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 이내에 상환 가능. • 채무변제원금의 10~20%를 최종상환일에 변제할 수 있음. 	<p>●상환 방법</p> <p>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최대 3년 이내이며,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1년 단위로 선택.</p> <p>●전환대출 이자율</p> <p>신청자 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10% 후반에서 20% 초반까지 차등 적용.</p>
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 시 '신용지원 중'으로 등록되나, 2년간 성실 상환 시 '신용지원 중' 기록은 삭제 	

2)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 프리워크아웃제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채권기관의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민간기구입니다(가끔 국가기관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와 프리워크아웃제가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사적 채무조정제도로서, 2개 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진 총 채무가 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약간의 원리금 탕감과 이자율 조정을 통해 최저생계비(법원의 개인회생제는 최저생계비 \times 1.5인 것과 구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최장 8년간 원리금을 갚아나가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정상이자에는 감면되지 않음), 변제기 유예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역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금융생활법률 九 VII

아이가 아픈데,
친지도 친구도
미안하다고
한다면?

급전이 필요할 때
고리대업체 대신
정부 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저소득·저신용층 생계비 저리 대출

1)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중소기업청, 6월부터 시행)

- 대출조건 : 1인당 500만원 이내, 금리 연 7~8% 수준

- 총 지원규모 : 5000억원(16만명 지원가능)

- 취급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추경예산(안)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1천억원)에 반영되어 국회심의 중

2) 일부 재산은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보유재산 담보로 생계비 저리용자 지원(보건복지가족부, 6월부터 시행)

- 대출조건 :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금리 연 3%(2년 거치 10년 상환)

- 총 지원규모 : 1조원(20만 가구 지원)

- 취급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등

※ 추경예산(안)에 반영(639억원)되어 현재 국회심의 중

3)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개발·판매를 활성화(금융감독원, 4월부터 시행)

- 대출조건 : 1인당 2000만원 이내, 금리 10% 수준

- 총 지원규모 : 1조4000억원(저신용자 24만명 혜택 기대)

- 취급 금융기관 : 우리은행·농협 등 14개 시중은행

- 1796억원 대출(2009년 4월 16일 현재), 지원실적을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반영



저소득층 창업자금지원사업(희망키움뱅크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이거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이 우선적으로 희망키움뱅크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공동체,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차량기준]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가구 제외, 배기량 구분 없이 2대 이상 보유가구 제외, 단, 생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 **지원내용** : 창업·운영 및 점포자금 : 2천만원 이내
 - ※ 설비비(시설보수,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상품구입비, 홍보비, 운영자금 등. 자활공동체의 경우 전세점포 임대자금 : 1억원 이내(2천만원 범위 내에서 창업·운영자금으로 사용가능)
- **취급기관** :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대출도 안 되고 당장이 급할 때 긴급지원제 이용

우리나라는 생활상의 위기가 발생할 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무상 제공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자’입니다. 단순한 생계비 부족뿐 아니라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등을 포함합니다.

위기사유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가족원에게 소득원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노인·아동학대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때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할 때 등을 가리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나뉩니다.

생계비 지원의 경우 2008년 현재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달에 약 126만 5848원을 현물·현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2개월 내에서 지원연장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등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1회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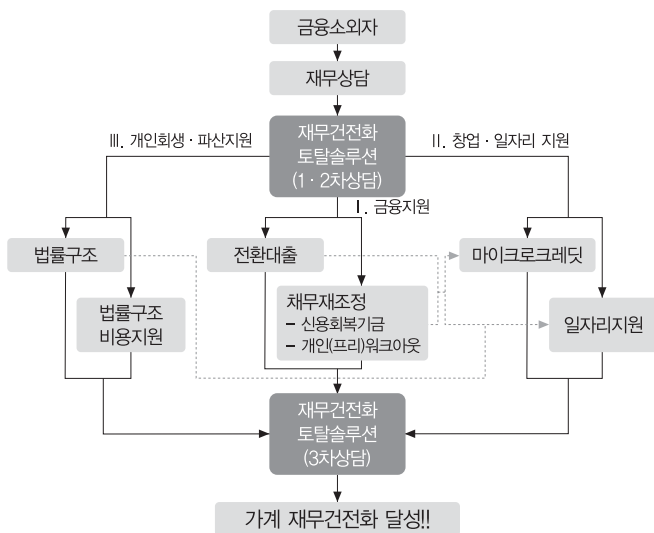
긴급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각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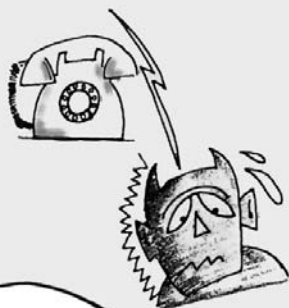
돈 없고 빚 많으면 이용해 보세요!

재무상담 · 채무조정상담 등 종합적인 도움,
복지부의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 저소득 금융소외자에 대한
'재무건전화 토탈솔루션' 지원 체계도



주요내용은 ①전환대출 신청자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자 약 3천명에게 재무상담-전환대출-사후관리 시행 ②회생이 어려운 금융소외 계층의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와 연계 ③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담보 창업자금 지원 등입니다.



금융생활법률 兂 VIII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1. 금융관련 연락처
2.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부당이자 반환 청구 상담 및 지원

금융관련 연락처 <2009년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

지역	신청기관	연락처	주 소
서울 경기 인천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02-365-033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번지 샤조빌딩 본관 200호 www.joyfulunion.or.kr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02-2665-0718~9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82-1 은천빌딩 3층 http://merryyear.org
	(사)천주교 사회 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 희망은행)	02-921-5093	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71번지 http://catholic-correction.co.kr
	경기광역자활센터	031-267-01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179 세지빌딩 5층 www.gpsc.or.kr
	인천광역자활센터	032-437-405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신27-5 사회복지회관 4층 www.injiwon.or.kr
전북	전북광역자활센터	063-226-038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사회복지회관 4층 http://jssc.or.kr
	(사)전북실업자 종합지원센터	063-232-97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번지 4층 http://jbuc.or.kr
전남	(사)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전남지부	061-863-0363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렬리 122번지 www.jnjahwal.or.kr
대구 경북	대구광역자활센터	053-359-3730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206번지 2층 www.openplace.or.kr
부산 경남	(사)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사회복지은행	055-283-9604	경남 창원시 사림동 2-7번지 2층 www.bsw.or.kr
	부산광역자활센터	051-868-5866~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457-10 이안빌딩 4층 http://busanjh.or.kr
강원	강원광역자활센터	033-244-0290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662 한국노총건물 3층 gwjahwal.or.kr
충청	(사)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충북지부	043-237-288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6호

※ 거주지 소재 기관으로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복지원 불가능

개인파산 · 개인회생 및 부당이자 반환 청구 상담 및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 소	전화
본 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532-0132
서울중앙지부	서울시 서초구 지방법원길 13(서초3동 1703-10)	02-3482-0872
서울동부지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16-2 제일빌딩 3층	02-457-4403
서울남부지부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17-3 승소빌딩 2층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서울 노원구 공릉1동 661-8 동신빌딩 5층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4층	02-713-6039
의정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031- 876-0954
고양출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91-4 보람빌딩 2층	031-907-2132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학익동 278-1 인천자검 2층	032-874-3374
부천출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8층 805호	032-325-5387
수원지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1층	031-211-1775
성남출장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23 신우빌딩 4, 5층	031-748-6177
여주출장소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72-8 동부빌딩 3층	031-884-7640
평택출장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245-1 수원지검 평택지청내	031-656-9144
안산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타운 3층 301호	031-482-2773
안양출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3 수원지검 안양지청내 105호	031-382-6373
춘천지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10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강릉출장소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 138번지 춘천지검 강릉지청 1층	033-645-3163
원주출장소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1049-2 2층	033-748-0763
속초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280-2 동명빌딩 2층	033-636-8511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859-24	033-373-1910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508 오성빌딩 8층	042-472-9062
홍성출장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48 대전지검 홍성지청내	041-634-4476
공주출장소	충남 공주시 반죽동 226-1 2층	041-857-6132
논산출장소	충남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 44-5, 2층	041-745-4478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예천동 600 서산지청내	041-667-4054
천안출장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85 경남빌딩 3층	041-563-6174
청주지부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06 청주지검 204호	043-299-4676
충주출장소	충북 충주시 충의동 14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43-854-0402

대한법률구조공단	주 소	전화업무
제천출장소	충북 제천시 중앙로2가 68-19 3층	043-646-5011
영동출장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04-3번지 청주지검 영동지청 내	043-744-960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8-2 대구지검내	053-740-3676
안동출장소	경북 안동시 정하동 235-2 안동지청 내 1층 법률구조실	054-856-2595
경주출장소	경주시 동부동 203-1 경주지청내	054-775-5553
김천출장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1222 대구지검 김천지청내	054-433-1780
상주출장소	경북 상주시 만산동 652-2 대구지검 상주지청내 1층	054-535-3277
의성출장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종리리 748 대구지검 의성지청내	054-833-5402
영덕출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1 대구지검 영덕지청내	054-734-1745
포항출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 대구지검 포항지청내	054-251-6111
서부출장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32 대구지검 서부지청내	053-573-1320
부산지부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501 부산지검내	051-505-1643
부산동부출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3-2 케이티(KT) 재송지점 4층	051-781-0710
울산지부	울산시 남구 옥동 635-3 울산지방검찰청내	052-228-4676
창원지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3 변호사회관 4층	055-266-3382
진주출장소	진주시 상대동 296-100 2층	055-760-4677
통영출장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57 창원지검 통영지청내	055-649-1830
밀양출장소	경남 밀양시 내이동 428 창원지검 밀양지청내	055-356-5131
거창출장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1-8	055-942-8436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2동 342-1 광주지검내	062-224-7806
목포출장소	목포시 용해동 818 광주지검 목포지청내	061-277-2025
장흥출장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신리 414-4 (주)KT 장흥지점 3층	061-863-8856
순천출장소	순천시 왕지동 777-1 광주지검 순천지청내	061-725-8121
해남출장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6 해남축협 2층	061-536-9945
전주지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 5층	063)251-4034
군산출장소	전북 군산시 조촌동 883 영창빌딩 3층 303호	063-472-4676
정읍출장소	전북 정읍시 수성동 989-6 정읍지청내	063-533-9644
남원출장소	전북 남원시 하정동 67-2 중앙약국 2층	063-626-5789
제주지부	제주시 이도2동 1025 이튼빌딩 2층	064-753-9955

발행일 : 2009년 6월

발행인 : 오재식(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발행처 :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 www.ksif.kr

삽 화 : 임동현(사회투자지원재단 차장)

주 소 :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4-60호 청람갤러리 B/D 4층

문 의 : 02-322-7020

이메일 : ksif@hanmail.net



사회투자지원재단
Korea Foundation for Social Investment

불법추심 및 고리사채 상담 02-322-7020